

# 피와 눈물로... 진실·명예회복·보상 끌어낸 주체

〈목차〉

제1부 되짚어 본 5·18

제2부 민주·인권의 가교

제3부 긍정에너지로 승화



## 노월을 넘어 광복을 넘어

###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심층 기획

#### ⑥ 5·18 단체가 걸어온 길

신군부세력의 퇴진을 요구하며 전개한 '5·18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이 희생당한 뒤에야 비로소 끝이 났다. 이후 피해 당사자와 가족, 시민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각각 단체를 구성한 뒤 5·18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5월 관련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이 단순한 집단 항거가 아닌 신군부의 반독재에 대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점을 알리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단체 간 민주화 투쟁의 방법이나 이론의 차이,

을 기울여 왔다.

이들 단체들의 공통된 활동은 90년 후반 책임자 처벌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 투쟁과 5·18 재판 투쟁이다. 이어 국가보훈대상자 지정, 망월동 묘지의 국립묘지로의 승격, 학살자들에 대한 서훈 처탈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어진다.

또한 묘역 성역화 사업(묘지 이장·유골감정·무명열사 신원확인 등)과 피해자 치료 및 재활 복지센터 건립운동, 상무대 법정 및 영창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5월 관련단체의 가장 큰 업적은 5·18 진실규명 활동에 하나가 돼 나섰다는 점이다. 이 같은 꾸준한 진실 규명 작업은 광주 민주

#### ■ 5월 피해자·가족 개별단체 주요 현황

단체명	개별사업	공동사업
(사)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무명열사 신원확인, 임매장 발굴 등	5·18 책임자 처벌 및 피해배상 특별법 제정운동
(사)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일해공원 명칭 반대 성명서 발표 5·18 민주화운동 생활실태 및 후유장애 실태조사	피해배상 특별법 제정운동
(사) 5·18 구속부상자회	상무대 법정 및 영창 복원사업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



5월 관련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1989년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5·18 진상 규명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위). 5·18 희생자 유족들이 1997년 5월 4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에서 17년간 잠들어 있던 유해를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장하기 위해 옮기고 있다. (사) 5·18 민주유공자유족회가 묘역 성역화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얻어낸 결과다.

장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화운동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단체들도 지역의 요구에 부응해 3개 단체 통합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월 관련단체 관계자는 "오는 5월 말까지 각 단체를 하나로 통합한 뒤 각 지역의 민주

세력과 상호연대·협조 체제를 정립, 전국화를 시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는 부마항쟁과 4·3사건 등 군부독재 체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피해자 가족 등과도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 서른살의 5·18에게

허연식

### “이합집산 거듭한 5·18 단체 30주년 맞아 마침내 하나로”



1980년 5월 30일 망월동 공원묘지 제 3묘원. 비닐에 싸인 채 가족을 묻어야했던 유가족들이 모였다. 5·18 단체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명칭이 없었으나 한 달 후 다시 모인 가족들은 '광주거기 유족회'를 구성하고 억울하고 비통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에게 들쭉날쭉 폭도와 불순분자라는 오명을 벗기기 위해 거리로 나서 투쟁을 시작했다.

5·18단체는 1980년 유족회를 시작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구속자들의 구명을 위해 모인 구속자가족회, 그리고 이듬해인 1981년 구속자들이 석방되면서 구속자협의회가 만들어지고 1982년 부상자회가 서슬 퍼런 탄압 속에서 어렵게 결성되었다.

광주학살의 원죄를 지우려는 당시 군사정권은 5·18단체의 진상규명 활동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았다. 회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시위를 위해 모이면 차에 싣고 강원도까지 격리를 하기도 했다. 남치나 닮은 이들의 만행은 벽지와 오지에 회원들을 내버려두고 돌아오기도 했다.

1982년 12월, 5·18희생자들이 묻혀있는 망월동 공원묘지 제3묘원 자체를 없애기 위해 희생자들의 묘를 이장시키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모두 26기의 희생자가 이장되었고, 이장에 동의하거나 협조한 유족들이 기관의 비호를 받으며 또 하나의 5.18유족회를 만들

었다. 5·18단체의 첫 분열이었다. 이어서 부상자회도 비슷한 상황에 의해 둘로 나뉘어졌다. 1990년 5·18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조직적인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5·18단체는 새로운 단체들이 구성되었고, 보상이 끝나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이 국회청문회 등을

통해 일정하게 드러나고 국가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5·18단체는 이해관계에 의한 이합집산을 거듭한다.

1990년대 초에는 10여개의 단체가 구성되었고, 이 단체가 함께 모여서 '5·18민주화운동연대'를 결성해 활동하다가 5·18기념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연합이 해체되면서 각 단체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후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고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은 법적, 제도적 명예회복이 실현됐다.

그러나 여전히 5·18단체는 국가유공자 단체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법단체로 등록하지 못한 채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로 나뉘어져 사단법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30주년을 맞는 새해 첫날, 5·18단체의 임원들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제 5월 영령과 지역민들의 염원대로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은 결국 5·18단체가 하나의 단체로 통합, 공법단체가 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5·18 민주유공자단체 통합추진위원회 간사>

### 피해자·가족·시민단체별 다양한 목소리 난립·반목도... 통합 민주화 세력 거듭나야

단체 구성원들 사이의 화력 및 성향에 따른 이질감 등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은 시·도민들에게 큰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가 3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자신만의 주장이나 이해를 벗어나 지역주의의 장벽을 해소하는 진정한 민주화운동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5월 관련단체는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0개의 크고 작은 단체들이 있었다. 이후 1999년에는 유가족·부상자·구속자 등 3개 주요단체와 그의 5·18광주거기청년동지회, 5·18상이후사망자유족회, 5·18광주민주화운동민주주의자동지회, 5·18광주민주화운동행방불명자가족회 등 4개 단체가 주로 활동했다.

세월이 지나면서 발전을 거듭한 5월 관련 주요 단체는 지난달 31일 현재 법인화된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와 '(사)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5·18 구속부상자회' 등 3개이다.

부상자회는 주로 불우회원 후원 사업과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회원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등에 주력해왔다. 구속자회도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사회운동을 통한 5·18정신 승화 사업, 지역간 화해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사업 등에 관심

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년)·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0년) 제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됐다.

'(재)5·18 기념재단'과 '5·18 학살자 재판 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위), '5월 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이하 시민연대)은 피해 당사자와 시민들로 구성된 연합단체다.

이중 광주·전남지역 노동자·농민·학생·여성·종교·의료계 등 136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위'는 지난 1995년 7월 학살 책임자 35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기소 처분되자 결성됐다. 학살자 기소 촉구 및 특별법 정취 운동, 검찰의 현장 수사지원 등 5·18 재판 운동을 지속적으로 주도해 해 왔다. 2년 뒤 재판이 종료되면서 자진해체됐다.

그러나 각 단체의 법인화는 집단의 창조적 발전과 활발한 활동을 제한하는 계기가 됐다. 더욱이 단체 설립 과정에서 보여 준 각 단체 간, 회원 간 갈등과 대립은 지역사회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는 5·18은 물론 지역의 다양한 단체간 갈등마저 빚는 계기가 됐다. 지역에서는 5월 단체들이 개별 단체의 입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경매대상 부동산의 위치, 면적, 용도, 권리관계 등 상세한 정보.

2. 경매의 절차, 기일, 그리고 참여 방법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

3.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 입찰금 납입 방법, 낙찰 후의 처리 절차 등.

4. 경매를 주관하는 법원의 연락처 및 담당자 정보.

5. 기타 관련 법령 조항 및 참고 사항.

광주지방법원 | 서울부동산 | 부동산